



해상작전헬기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 '2012년도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2011. 11. 11)의 한 쪽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해상작전헬기 운영 시 함정은 적의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 및 공격 가능하여 대잠 작전수행능력 향상
- ② 해상작전헬기 탑재 운영을 통해 서·남 해역의 복잡한 해안선 및 도서 지역에 대한 함정의 감시 공백 최소화
- ③ 대테러 지원 작전(아덴만 여명작전 사례), 해상 탐색구조/긴급환자 이송 등 임무 수행 가능.

2.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 ① 한국군은 잠수함 전력에서 대북 우위에 있고 대잠 탐색, 공격 능력을 갖춘 함정, 항공기 및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대잠전을 위해 추가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 북한의 잠수함·정은 63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로미오급이 22척, 상어급이 21척, 유고급이 20척이다(『Military Balance 2010』). 로미오급은 수상배수량 약 1,500톤, 수중 속력 13노트로 건조된 지 40년이 다 되어 전투함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상어급도 수상배수량 277톤, 수중 속력 7노트의 30년이 다 된 구형 소형 잠수함으로, 정규 작전이 아닌 특수작전용 잠수함이다. 유고급은 수상배수량 90톤, 수중 속력 8노트의 잠수정에 불과하다. 이에 『Military Balance 2003~4』와 『2003~4 동북아 군사력』(국방연구원)은 북한 잠수함 중 26척만 전투서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 남한 해군의 잠수함·정은 20여 척이다. 이 중 특수 작전용으로 제작된 돌고래급을 제외하더라도 장보고급 잠수함(9척)은 수상배수량 1,200톤, 수중 속도 21노트, 손원일급 잠수함(3척)은 수상배수량 1,800톤, 수중 속도 20노트로 제원에서 북한 잠수함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탐지거리와 무장 등에 있어서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 잠수함이 대북 우위를 누리고 있다. 손원일급은 이후 6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 이렇듯 전투서열에 포함될 수 있는 남북한 잠수함은 26 : 12(+α) 정도로 개수비교에서는 남한이 열세이나 남한 잠수함의 성능이 단연 앞서 있기 때문에 남한 잠수함 전력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남한은 북한의 잠수함·정의 침투를 크게 우려한다. 북한 잠수함·정 중에서 대남 침투에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은 상어급과 유고급 합쳐 모두 40여 대다. 그러나 유고급은 속도가 느리고 모함을 이용해야 함으로 한국군의 감시·정찰망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1996년 강릉 해역에서 좌초되었던 상어급도 이미 출항 때부터 미군에 의해 포착되었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도 한국군이 북한 해군기지에서의 잠수함들의 입·출항을 거의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잠 감시·정찰체계를 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북한 잠수함·정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1일 최소 3시간 이상 부상/반잠항 항해가 요구”되기(『동북아 군사력 2003~4』, 500 쪽) 때문에 남한 대잠 탐색자산을 피해 장시간 항행하기 어렵다.
- 북한 잠수함·정이 남한 해역을 침투하여 수행하게 될 임무 중의 하나는 특수부대나 요원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상어급 승조원은 최대 20여 명, 유고급은 10여 명으로 잠수함·정을 통한 특수요원의 침투는 고작 10여 명 이내여서 큰 위협으로 되지 못한다.
- 북한 잠수함·정이 남한 해역을 침투하여 수행하게 될 임무 중 다른 하나는 남한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임무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정은 무장의 제약으로 대잠 공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따라서 북한 잠수함·정이 남한 해역을 침투하여 수행하게 될 거의 유일한 임무는 남한 수상전투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한 모든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28척의 초계함에는 PHS-32 HMS, 9척의 호위함에는 PHS-32 HMS와 TB-260K TACM 소나, 12척의 구축함에는 DSQS-21 BZ-M HMS 소나와 TB-220K TASS 소나를 장착해 잠수함

과 어뢰를 탐지하고 있다. TASS는 10Km 거리의 잠수함을, DSQS-21 BZ-M HMS는 5Km 거리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잠수함은 “저속으로 고속 회피하는 표적 공격 시 접근이 곤란”하기(『동북아 군사력 2003~4』, 500 쪽) 때문에 고속으로 기동하는 남한의 수상전투함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다.

-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대잠전 능력을 갖춘 P-3C/K 항공기 16대와 링스 헬기 24대 등 모두 40대의 대잠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대잠전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잠전 능력을 갖춘 PS-5 항공기 4대와 Z-9C 헬기 25대 등 총 29대의 대잠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Military Balance 2010』). 중국의 관할 해역이 남한 해역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남한 보유의 대잠 항공전력의 충분성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잠 항공전력은 P3C기 80대와 91대의 SH-60J/R 헬기 등 모두 171대로 남한의 4배를 넘어서고 있다(『Military Balance 2010』). 그러나 일본이 섬나라로 남한 해역의 수배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고 있고, 또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구 소련과 중국, 부분적으로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항공전력이라는 점에서 대북 대잠전 위주의 한국 대잠 항공전력의 충분성(과잉성)을 잘 알 수 있다.
- 링스 헬기는 최대 항속거리 620Km, 최대 체공 시간 2시간 50분, 최고 시속 306Km로, 대잠 수중 탐지기인 Dipping Sona와 Sonobuoy를 장착하고 있다(공군본부, 『항공우주무기 총람』, 1999). 링스 헬기는 어뢰를 장착한 상태에서 약 100Km의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나의 탐지거리도 18Km에 이른다. P-3C/K는 작전반경이 3,800여 Km에 달하며, 평균 시속 380 Km에 레이더 반경은 360Km다. 이러한 대잠 탐색 능력을 갖춘 40여 대의 링스 헬기와 P-3C/K라면 남한 동·서 해역에 대한 조밀하고 중층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해군은 수백 Km 거리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국정원 소유의 ‘신세기 정보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안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문무’ HUSS도 운용되고 있다.
- 이렇듯 북한 잠수함·정은 소수의 소형, 구형 잠수함으로 대남 침투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정의 대남 침투를 탐색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② 서남 해안이나 도서에 대한 감시나 대테러 지원 작전, 해상 탐색구조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해상작전헬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장비는 많이 보유할수록 좋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 서남 해안이나 도서에 대한 감시는 그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보유한 해군 헬기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서남 해안을 통한 북한 특수 요원의 침투는 2000년대 들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해군은 링스 헬기 이외에 5기의 기동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도함에 탑재되는 UH-60 8대와 UH1H 1대 등의 헬기도 대테러 지원이나 해상 탐색구조,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전혀 손색이 없다.
-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북한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를 능가하는 많은 수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6대의 MH47E 특수작전헬기를 비롯해 337대의 다양한 (무장)기동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도 56대의 기동헬기와 지원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해군이 주장하는 감시·탐색·구조·수송·(테러)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보유 (공격, 기동)헬기 이상의 전력 지원이 요구된다면 육·공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전력을 지원 받으면 된다.

3. 사업 중단 필요성

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해상작전헬기는 1차(2012~2017) 물량 8대를 해외 구매하고, 2차(2018~2025) 물량 10대는 2012년 6월 이후 KUH의 운용시험평가에 완료되는 2012년 6월 이후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0대를 국내 개발로 생산하는 것은 KAH 사업의 선례에 비춰 볼 때 해외 수요가 없다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물량으로 2차 물량의 도입도 해외 구매로 결말날 가능성이 크다.
- 이는 불요불급한 해상작전헬기의 도입을 서두름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KUH 사업에 기반한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수요 및 해외 수요가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경제성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때 가서 꼭 소요 물량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

- 또한 해상작전헬기의 도입 시기를 늦춘다면 성능이 검증된 기종을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보다 싼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②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첫째 목표는 남한 해군의 대잠전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대잠전을 위해서는 저주파 Dipping Sonar 및 Sonobuoy의 탑재가 필수이나 NH-90, AW-159와 같은 유럽 기종들은 개발 중인 기종으로, 개조 없이 이들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12년에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70B, MH-60R과 같은 미국 기종이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일정은 F-X 사업이나 대형공격헬기 사업처럼 미국 기종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국방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 따라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작전성능이 충족되는 기종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다.

③ 한편 국방부가 제시하는 사업 일정 자체만으로도 2012년 10월까지도 도입 기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F-X 사업이나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선 직전의 민감한 시기에 굳이 불요불급한 해상작전헬기의 도입 기종을 결정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④ 더욱이 해군은 해상작전헬기의 추가 도입을 요구하기 이전에 불량정비 문제와 같이 먼저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가 있다.

- 2010년 4월 15일, 17일 진도와 소청도 해역에서 링스 헬기 2대가 연이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해군은 부정하였으나, 허위 정비 때문이었다. 군 감찰 수사는 몇몇 검수 책임자를 경징계하는 데서 그쳤으나 폐부품을 반납 받는 등의 기초적인 검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불량정비이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였다.
- 따라서 불합리한 군수장비의 정비계약제도의 개선(정확한 정비 계약과 부품 교환에 의한 정산, 현장, 검수 등의 정확한 정비 검사는 법령에 의거한 의무)과 이의 철저한 이행, 감독을 정착시키는 것이 해상작전헬기 도입보

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다.

- 그렇지 않다면 제아무리 고성능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더라도 대잠 전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인명이 손실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만 낳게 것이다.